

# 딥페이크 및 디지털 성범죄 방지와 강력 처벌 촉구 결의안

(성해련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597
----------	------

발의연월일: 2024년 9월 5일

발의자: 성해련, 안극수, 박명순, 김윤환,  
박기범, 민영미, 정연화, 이준배,  
강상태, 서은경, 김선임, 윤혜선,  
이군수 (이상 13명)

## 1. 제안이유

-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동의 없이 생성된 성적 이미지나 영상이 온라인상에 유포되어 심각한 인권 침해와 정신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음.
- 특히, 청소년을 포함한 대학생 및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로 노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고립과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고 공론화와 같은 2차 가해 및 피해 예상으로 신고와 수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청소년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법적 조치와 예방 교육이 요구되고 있음.
- 따라서, 딥페이크 및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철저한 예방 조치를 통해 이러한 범죄의 확산을 막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본 결의안을 촉구함.

## 2. 주요내용

- 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성적 이미지와 영상이 조작·유포되며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인권 침해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대한 즉각적이고 철저한 법적 조치가 시급히 필요함.
- 나. 정부, 국회, 지자체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확립할 것을 요구함.
- 다. 딥페이크 및 디지털 성범죄의 발생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강화하고 새로운 기술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술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

## 3. 결의문(안): 별도 붙임

## 4. 기타사항

- 이송기관: 대통령실, 국회, 교육부, 경찰청,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 붙임: 딥페이크 및 디지털 성범죄 방지와 강력 처벌 촉구 결의안 1부.

# 딥페이크 및 디지털 성범죄 방지와 강력 처벌

## 촉구 결의안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은 국민이 이번 딥페이크 성범죄 사태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의 안전을 보장받고, 피해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딥페이크 및 디지털 성범죄 방지와 강력 처벌을 전 성남시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한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성남시민을 포함한 수많은 이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딥페이크로 조작된 성적 이미지나 영상이 온라인상에 유포되며,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인권 침해를 겪고 있다.

하지만 현재 딥페이크 관련 피해자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확인조차 어렵다. 딥페이크와 관련된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사건이 공론화되지 않으면 통계나 사례로 드러나기 힘들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학교나 지역의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성남시와 같은 대도시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다. 청소년들이 이러한 범죄의 피해자가 될 경우 심리적,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학교와 지역 사회에서의 예방 교육과 보호 조치가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대응은 아직도 미흡한 상황이며,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는 것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으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강력한 처벌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이에 우리 성남시의회는 딥페이크 및 디지털 성범죄의 방지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딥페이크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엄중한 처벌을 규정하는 법안을 즉시 추진하라.

하나. 정부, 국회, 지자체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확립하라.

하나. 딥페이크 및 디지털 성범죄의 발생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강화하고 새로운 기술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술적 기반을 마련하라.

2024. 9. .

**성 남 시 의 회**